

## 제303호(2011. 3. 28)

---

### ■ 경제 동향

- 2010년 국내 건설기성 2.7% 증가

### ■ 정책 · 경영

- 3.22대책, 주택 거래 둔화 · 수도권 미분양 등 일부 부작용 우려
- 건설업 5년 생존율 28%, 19개 업종 중 하위 3위

### ■ 정보 마당

- 일본 건설기술인력 법정직무교육 현황

### ■ 연구원 소식

### ■ 건설 논단 : 「일본의 재난 극복 과정 참여와 학습 효과」

## 2010년 국내 건설기성 2.7% 증가

- 토목 기성은 견조한 증가세, 주택 기성은 2년 연속 감소 -

### ■ 2010년 건설기성 2.7% 증가,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

- 2010년 국내 건설기성은 전년 대비 2.7% 증가에 그친 92조 2,383억원을 기록, 생산자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여 최근 침체한 건설 경기 상황을 대변함.
- 전년 대비 2.7%가 증가한 것은 지난 2006년에 2.6%가 증가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임.
- 2010년 생산자 물가상승률이 3.8% 증가한 것을 감안, 불변가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3.3% 감소한 것임\*.

### ■ 2010년 토목 기성 8.8% 증가, 견조한 증가세 지속

- 2010년 토목 기성은 2009년 급격히 증가한 토목수주의 기성 진척으로 전년 대비 8.8% 증가한 40조 3,679억원을 기록, 역대 최대액을 경신함.
- 토목 기성은 2008년 전년 대비 10.5% 증가하였으며, 2009년 정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공공투자가 본격적으로 증가해 상승폭이 17.5%로 확대됨.
- 2010년도 역시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해 전년 대비 8.8%가 증가함.
- 대규모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으로 일반토목 기성이 전년 대비 3.2%가 증가하였고 신울진 원전의 기성 진척으로 전기기계 기성이 72.5%가 급등함.
- 또한, 민간 부문의 대규모 기계설치 공사 증가로 플랜트 기성도 6.8%가 증가함.

#### <연간 공종별 건설기성 추이>

(단위 : 십억원, 전년 동기비 %)

구 분	기성액					증감률				
	총계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총계	토목	건축	주택	비주택
2006년	77,838.9	26,727.5	51,111.4	34,710.4	16,401.1	2.6	4.3	1.8	2.3	0.7
2007년	82,938.8	28,594.2	54,344.6	36,216.4	18,128.2	6.6	7.0	6.3	4.3	10.5
2008년	87,032.1	31,599.0	55,433.0	36,296.7	19,136.4	4.9	10.5	2.0	0.2	5.6
2009년	89,818.8	37,114.0	52,704.8	33,162.5	19,542.3	3.2	17.5	-4.9	-8.6	2.1
2010년	92,238.3	40,367.9	51,870.5	30,498.1	21,372.3	2.7	8.8	-1.6	-8.0	9.4

주 : 종합건설업체 중 전년도 누계 기성액 50% 정도 상위기업체로 조사, 189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함.  
자료 : 통계청.

\*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불변가격 기준 2010년 건설 기성액은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토목 기성이 2.2% 증가한 반면 건축 기성은 7.2% 감소하였음.

## ■ 주택 기성의 침체로 건축 기성 1.6% 감소, 2년 연속 감소

- 건축 기성은 비주택 기성이 호조를 보였으나, 주택 기성의 침체로 전년 대비 1.6%가 감소한 51조 8,705억원을 기록함.
  - 비주택 건축 기성은 전년 대비 9.4%가 증가한 21조 3,723억원을 기록, 토목 기성과 함께 역대 최대액을 경신함.
  - 비주택 기성이 호조를 보인 것은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사무실과 공장·창고 등의 공사가 증가하였고 정부의 관공서 공사 또한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주택 기성은 전년 대비 8.0%가 감소해 2년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며, 연간 실적으로는 7년 내 가장 부진한 30조 4,981억원을 기록함.
  - 주택 기성이 감소한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신규 공사가 증가하지 않은 가운데, 2008년 이전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해 사업승인을 받아 진행 중이던 대규모 아파트 공사들이 2009년과 2010년 완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 민간 직영공사 및 민간투자사업의 기성 감소 현저

- 발주자별로 공공 기성이 8.5% 증가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민간 기성은 직영공사의 위축으로 0.5% 증가에 그쳤으며, 민자 기성은 9.2% 감소함.
  - 공공 기성은 8.5%가 증가한 35조 1,634억원을 기록함.
  - 민간 기성은 0.5% 증가에 그친 52조 7,768억원을 기록, 구체적으로 도급 공사로 인한 기성이 2.2% 증가한 반면, 직영 공사 기성이 1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민자 기성은 9.2% 감소한 4조 724억원으로 3년 내 가장 부진한 실적을 기록함.

### <발주자별 연간 건설기성 추이>

(단위 : 십억원, 전년 동기비 %)

구 분	기성액					증감률				
	공공	민간	민간직영	민간도급	민자	공공	민간	민간직영	민간도급	민자
2006년	23,159.4	52,147.7	8,812.0	43,335.6	2,407.1	0.6	4.0	-5.4	6.1	-2.7
2007년	25,097.9	54,559.1	7,254.9	47,304.2	3,211.4	8.4	4.6	-17.7	9.2	33.4
2008년	26,718.5	55,746.9	6,909.8	48,837.1	4,451.0	6.5	2.2	-4.8	3.2	38.6
2009년	32,394.3	52,533.3	5,860.4	46,672.9	4,487.4	21.2	-5.8	-15.2	-4.4	0.8
2010년	35,163.4	52,776.8	5,090.6	47,686.2	4,072.4	8.5	0.5	-13.1	2.2	-9.2

자료 : 통계청

박철안(연구원 · igata99@cerik.re.kr)

## 3.22 대책, 주택 거래 둔화·수도권 미분양 등 일부 부작용 우려

- 주택시장의 수요 위축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정책·제도적인 보완책을 강구해야 -

### ■ 3.22 대책의 주요 내용

- 3월 22일에 발표된 ‘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은 2010년의 ‘8.29 대책’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를 당초 예정대로 3월 말에 종료하고, 4월부터는 8.29 대책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는 것이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음.
  - DTI 규제가 환원됨으로써 투기지역은 40%, 투기지역 외 서울지역은 50%, 인천·경기 지역은 60%의 DTI 적용을 받게 됨.
  - 다만, 서민·중산층 실수요자의 주택 거래를 위하여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DTI 비율을 최대 15%p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함.
  - 시장예의 충격을 감안하여 보완 조치로서 주택 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을 201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현재보다 50% 감면하고, 민간 택지(투기지역 제외)의 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조속히 논의하여 추진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 주택시장에의 파급 효과

- 기존 주택시장에는 금융 규제가 강화됨으로써 주택 가격 및 주택 거래량이 둔화되는 등 냉각 조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의 주택 가격은 1차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비율) 규제(2009. 7. 7), 2차 DTI 규제(2009. 9. 7)로 인하여 2009년 8월부터 다시 하락세로 전환됨.
  - 주택 거래량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음.
- 신규 주택시장(분양시장)은 DTI 규제 환원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수요층의 관망세 전환 등 기존 주택시장의 침체에 따른 영향을 받아 일부 광역시 분양시장의 호조와 달리 수도권에서는 미분양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됨.
  - 2009년 9월 7일 DTI 규제를 도입할 때 전 금융기관 합산 5,000만원 이하 대출, 분양주택의 집단대출(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미분양주택 담보대출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2011년 2월 현재 전년 동월 대비 전국의 준공후 미분양은 5,262호로 감소하였으나, 수도권에서는 5,909호(85㎡ 초과인 경우는 4,397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세시장은 수요 심리의 위축에 따른 주택 매매의 감소로 쏠림현상이 나타나 전·월세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 2011년 입주물량이 예년 대비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3.22 대책에 따른 매매시장의 침체가 예상되며, 24개월 연속 14.8%에 이르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전·월세가격도 불안정하게 만들 우려가 있음.

### ■ 주택시장의 수요 위축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정책 · 제도적인 보완 필요

- 이번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발표로 실수요자는 이전보다 대출금액 상향에 따른 주택구입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주택시장의 수요 위축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주택 수요 진작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의 경우 주택구매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을 현행 취득 당시 3억원 이하 주택의 15년 이상 장기대출에서 취득 당시 5억원 이하 주택(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유지)의 20년 이상 장기대출로 확대 적용해야 함.
- 미분양과 관련해서는 정책의 중심을 지방 위주에서 미분양 증가가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 미분양 리츠와 펀드의 세제 혜택 요건 가운데 지방 미분양 50% 편입 요건을 삭제하여야 함.
-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입법 천명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택법」의 개정이 수반되어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제거함으로써 시장을 정상화해야 함.
- 중장기적으로는 인구 구조의 변화나 가구 분화의 가속화 등 주택시장의 환경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개선 등 세제 및 주택 공급 제도 전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노력이 필요함.

두성규(연구위원 · skdoo@cerik.re.kr)

## 건설업 5년 생존율 28%, 19개 업종 중 하위 3위

- 건설업, 활발한 창업과 치열한 생존 경쟁이 공존하는 산업 -

### ■ 중소기업, 창업 초기 퇴출 위험도 높아

- 창업 초기에 중소기업은 경쟁업체가 많고, 틈새시장을 찾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수 인재 확보가 힘들어 생존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중소기업은 창업 초기에 퇴출될 위험이 높고, 약 5년 이후부터 위험률이 체감되는 것으로 조사됨.

### ■ 신규 사업체의 1년 생존율은 약 70%, 5년 생존율은 약 35%

-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사업체 생멸통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규 사업체의 1년 생존율은 약 70%, 2년 생존율은 약 55%, 3년 생존율은 45%, 5년 생존율은 35%인 것으로 나타남.
- 신규 창업하는 업체 수는 연평균 59.5만 개이고, 휴업 또는 폐업하는 업체 수는 연평균 57.7만개로 전국적으로 연간 1.8만개의 업체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 전체 사업체 생멸의 절반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
- 신규 사업체의 46.1%, 휴·폐업 업체의 48.9%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차지
- 2009년 우리나라의 총 사업체수는 329.3만개 이고, 이중 건설부문의 사업체는 9.4만 개로 전체 사업체의 2.9%를 차지\*\*

### ■ 건설 부문 신규 업체 5년 생존율 27.8%, 19개 업종 중 17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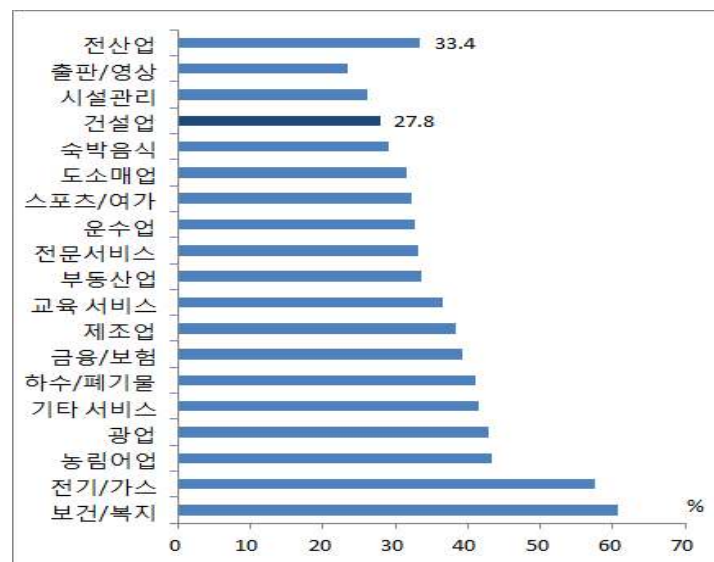
- 건설 부문 사업체는 연평균 2.2만개 업체가 창업되고, 연간 2.0만개가 휴·폐업
- 창업하는 업체 수는 2005년에 2.7만개를 정점으로 하여 2009년에는 1.7만개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통계청, '2004~2009 사업체 생성·소멸(생멸) 현황 분석', 2011. 2.

\*\* 일반 및 전문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표준산업분류에서 F건설업에 속하는 설비, 실내건축, 장비 임대업 등도 포함

- 건설업 생존율은 1차 연도 69.8%, 3차 연도 40.9%, 5차 연도 27.8%인 것으로 조사되어 타 산업과 비교하여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건설업의 5년 생존율은 19개 업종 중에서 하위에서 3위를 기록
  - 신규 업체 생존율이 높은 부문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부문으로 5년 생존율이 60.7%이고, 전기·가스·수도업 역시 57.6%로 매우 높았음.
- 건설부문의 2004~09년 기간 중 신규 업체 진입률은 24.5%, 퇴출률은 22.4%로 나타나, 창업도 상대적으로 활발하고, 휴폐업도 빈번했던 것으로 나타남.
  - 건설업의 진입률 및 퇴출률은 19개 업종 중에서 모두 상위 3위
  - 진입률 및 퇴출률이 건설업보다 높은 업종은 시설관리 및 출판·영상업이며, 산업 전체 평균 진입률은 18.3%로 건설업에 비해 6.2%p나 낮고, 퇴출률 역시 17.8%로 낮음.

&lt;신규 업체 5년 평균 생존율&gt;



## ■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 필요

- 건설 부문은 창업도 활발하고 휴·폐업도 빈번하다는 사실은 진입 장벽이 낮아 창업이 용이하지만, 경쟁도 치열하여 생존율이 낮은 불안정한 구조임을 시사
- 준비 없는 창업으로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과 아울러 새로 창업한 업체의 합리적 경영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

권오현(연구위원 · ohkwon@cerik.re.kr)

## 일본 건설기술인력 법정직무교육 현황

- 전국건설연수센터의 계속교육, 70개 프로그램으로 구성 · 과목당 평균 4.5일 교육 -

### ■ 일본 건설기술인력 법적 보수교육, 감리기술자와 기술사 교육으로 양분

- 현재 일본에서는 기술자 역량을 중요시하고는 있으나, 일본 정부(국토교통성)가 직접 나서서 기술자 역량 확보를 위한 특별한 지원책을 실시하지는 않고 있음.
- 기술자 보수 교육기관도 특정 기관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으며, 어떤 기관이든 「건설업법」에 제시된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신청하면 지정이 가능
- 현재 일본의 건설기술인력에 대한 법적 보수교육은 감리기술자(1급 국가자격자와 이에 상응하는 자격자)와 기술사에 대한 교육으로 양분됨. 그 외 법적인 의무에 의해 이뤄지는 교육은 없는 상황임.

### ■ 감리기술자 법정직무교육, 5년에 1회 1일 교육으로 끝나

- 법정직무교육 중 하나인 감리기술자 법정직무교육은 1일 교육으로 끝나며, 5년에 한번 갱신교육을 받음.
- 강습 과목은 ① 건설공사에 관한 법률 제도(1.5시간), ② 건설공사의 시공계획의 작성, 공정관리, 품질관리 그 외의 기술상의 관리(2.5시간), ③ 건설공사에 관한 최신 재료, 기자재 및 시공방법에 관계되어 필요한 사항(2.0시간) 등임.
- 강습 시간은 총 6시간으로 전 기관 공통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수업 종료시 이수평가를 하며 수료증을 교부하는 형식의 간단한 교과 과정임.
-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직무교육은 승급교육과 전문교육 등으로 나뉘어 있지 않음.

### ■ 기술사 법정직무교육, 3년간 150CPD 취득해야

- 기술자는 1급이 된 후 법정직무교육인 CPD(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계속전문개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3년 간 150CPD(매년 30CPD 이상)를 취득해야 함.
- 대표적 교육기관인 전국건설연수센터의 CPD 과정은 12개 부문, 70개 프로그램으로 구



성되어 있음.

- 건축 직종은 1개 부문, 10개의 연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프로그램당 평균 5일의 교육 과정임.
- 토목 직종은 7개 부문 41개의 연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프로그램당 평균 약 4.5일의 교육 과정임.
- 공통(건축+토목) 직종은 4개 부문, 19개의 연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프로그램당 평균 4일의 교육 과정임.

#### <CPD 과제와 구분>

구분	과제 항목	내용
(A) 일반 공통 과제	1. 윤리	윤리 규정, 직업 윤리, 기술 윤리, 기술자 윤리(기술의 인류 사회에게 주는 장·단기적 영향의 평가를 포함한 기술사에게 부과된 공익성 확보의 책무 등)
	2. 환경	지구 환경, 환경 영향 조사, 지역 환경, 자연 파괴 등 환경 과제의 해결 방법 등
	3. 안전	안전기준, 방재 기준, 위기관리, 화학물질의 독성, 제조물 책임법(PL법) 등
	4. 기술 동향	신기술, 정보기술, 품질 보증, 규격·사양 등
	5. 사회 동향	국내·해외 동향(국제 무역 동향, GATT/WTO, ODA 등), 상무협정 및 기술에 대한 요구 동향 등
	6. 산업 경제 동향	국내외 산업 경제 동향, 노동시장 동향 등
	7. 규격·기준의 동향	ISO, IEC 등
	8. 매니지먼트 수법	공정 관리, 코스트 관리, 자원 관리, 유지 관리, 품질 관리, 프로젝트 관리, MOT, 리스크 관리, 씨큐리티 관리 등
	9. 계약	역무 계약, 국제적인 계약 형태 등
	10. 국제 교류	영어에 의한 프레젠테이션·커뮤니케이션, 해외(학회·전문지)에의 논문·기술 문서 등의 발표·게재, 국제사회의 이해, 각국의 문화 및 역사 등
	11. 그 외	상기 1~10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
(B) 기술 과제	1. 전문 분야 최신 기술	전문으로 하는 기술, 그 주변 기술 등의 최신의 기술 동향
	2. 과학기술 동향	전문 분야, 과학기술 정책, 해외의 과학기술 동향 등
	3. 관계 법령	업무에 관련 있는 법령(특히 개정 시점)
	4. 사고 사례	동일한 사고를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한 사례 연구(사례 연구법) 및 사고 해석 등
	5. 그 외	상기 1~4에 포함되지 않는 기술 관련 사항 등

자료 : <http://www.engineer.or.jp/cpd/cpd-p080401-2.pdf>

최은정(연구원·kciel21@cerik.re.kr)

## ■ 주요 정부 및 기타 공공, 유관기관 회의 및 세미나 참여 활동

일자	기관명	주요 내용
3.21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개혁법무관실 주최 ‘국토부동산 분과 자체규제 심사회의’에 건설정책연구실 박용석 연구위원 참여</li> <li>- 골재채취업 등록의 취소 등 「골재채취법」 개정안에 대한 규제 심사</li> </ul>
3.22	국토해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개혁법무관실 주최 ‘국토부동산 분과 자체규제 심사회의’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연구위원 참여</li> <li>-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에 대한 규제 심사 및 자문</li> </ul>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 건설경제연구실 김현아 연구위원 참여</li> <li>- 전세시장 불안 등에 따른 주택시장에 대한 동향 분석 및 문제점 진단과 경기도 주택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li> </ul>
3.25	국민권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패방지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 건설산업연구실 강운산 연구위원 참여</li> <li>- 반부패 아이디어 발굴 및 부패방지 관련 현안에 관한 논의 및 자문</li> </ul>

## ■ 발간물 현황

유형	제목	주요 내용
건설이슈포커스	외국의 건설공사 파트너링 방식의 운영 현황 및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생산은 발주자와 원도급자, 하도급자 등 다양한 공사 참여자가 상호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나, 국내에서는 각종 칸막이식 업역 규제와 수직적 생산 체계, 장기적 협력 관계 부재 및 저가 낙찰 등으로 건설생산주체 간 대립과 갈등이 지속</li> <li>■ 파트너링 방식이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과 업무의 중복, 불공정 거래관행 등에 대하여 프로젝트 참가자 전원이 합의하여 ‘파트너링 협정’을 체결하고, 프로젝트 성공을 위하여 공동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임.</li> <li>■ 국내에서는 각종 규제에 의거하여 원하도급 간 상생협력만을 강조하고 있으나, 외국의 사례를 볼 때 발주자가 중심이 되어 파트너링 방식을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함.</li> </ul>

## ■ 연구원 · 주거복지연대 공동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세미나’ 개최

- 연구원은 주거복지연대와 공동으로 3.29(화) 오후 2시 건설회관 2층 회의실에서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를 통한 주거복지향상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 제1주제 : ‘최근 전·월세시장의 동향과 문제점’(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제2주제 : ‘다주택자의 긍정적인 시장 기능 회복 방안’(이창무 한양대학교 교수)
  - 제3주제 : ‘현행 임대차제도의 체계 전환 방안’(박신영 주택도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종합 토론 : 중앙대학교 하성규 교수의 사회로 각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진행
- 문의 : 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http://www.cerik.re.kr)) 또는 연구원 기획팀(02-3441-0701, 0815)

## 「일본의 재난 극복 과정 참여와 학습 효과」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과 해일 등 천재지변은 우리에게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지진을 원인으로 하는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자체력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은 일본 국민들의 인내력을 빼앗아 갈 수준까지 심화되고 있다.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를 너무 쉽고 단순하게 예측·예단한 후 이를 사실로 과대포장하고 있는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도 나타나고 있다.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에 해당된다.

지진과 해일, 그리고 원전사고 수습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공포심을 유발 할수록 처방은 근원이 아닌 땀질식으로 가게 된다. 일본에서 진행 중인 지진과 해일, 원전사고 등 수습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을 국내는 아직 방관자 입장에 있다. 물론 국가와 국민적인 모금 활동이나 긴급구조대가 파견 되는 등 일부 지원 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도 있다.

현재 시점에서 선부른 예단을 하기보다 일본의 긴급재난 복구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을 찾아내는 데 전략적인 동참이 필요해 보인다. 자연 및 인재로 인한 천재지변성 재난은 과학·기술로는 예방 할 수 없다는 주장이 미국 공학한림원이나 일본 기술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기후변화 등 원래부터 잠재되어 있는 자연 현상이든 인류의 통제권 밖인 자연재해를 원천적으로 방지 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또 경제 활동을 정상적으로 신속하게 복귀시키는 전략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는데 전력투구하는 게 더 필요해 보인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중요하다. 그렇다고 선부른 속단으로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희생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 시점에서는 재난을 당한 일본이 위기를 극복해 가는 기술과 과정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이를 벤치마킹하여 배울 점을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 일본 원전 재난을 빌미로 국내 가동 중 원전은 물론 신규 건설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도 있다. 1979년 3월 미국 동부에서 발생했던 원전사고로 일부 서유럽 국가들이 원전 폐쇄를 전격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원전은 현재도 가동 중이다. 준비되지 않은 폐쇄로 국가와 국민들이 입을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정치·사회적 복한 변수가 일본 지진보다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예측된 시나리오가 없기 때문이다. 자연재해 또한 무시 못 하는 건 사실이다. 한반도에서 긴급 재난이 발생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대응전략은 아무리 완벽하게 해도 부족함이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복남(연구위원 · bnlee@cerik.re.kr)